북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임박…한국인은?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계 미국인들 석방 협상 성과 시사

선교사 등 한국인 6명 억류…靑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억류자들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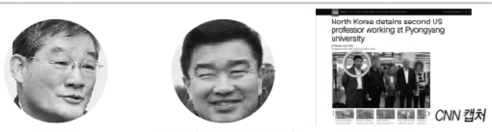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3년 10월에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또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 등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억류돼 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만한 사안은 없다"면서 "정부는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라는 트윗을 올려 북한과의 석방 협상에 성과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들 억류자가 노동교화소에서 나와 호텔로 이송됐다는 언론보도와 맞물려 양측이 억류자 송환 협상에 합의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이름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직업	목사	나진·선봉 지역 어린이 지원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	평양과학기술대학 봉사자
체포 장소	함경북도 나선	북한 방문 출국 당시	평양역
억류 시기	2015년 10월~	2017년 4월~	2017년 5월~
사유	간첩, 체제전복	적대행위	적대행위
처벌	노동교화형	노동교화형	노동교화형

CNN 캡처 / 연합뉴스

앞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한국시각으로 2일 평양의 한 주민에게서 들었다며 "북한 관계기관이 4월 초 상부 지시로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겼다"고 전했다.

억류된 미국인 3명은 북한에서 적대행위 또는 국가전복음모 등의 죄목으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대목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초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가진 극비 면담에서 억류자 송환 협상이 돌파구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곧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당시 북미 간 억류자 송환 협상에서 양국이 모종의 합의를 봤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 두 정상간의 '비핵화 담판'에도 훈풍을 조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 미국 요구 방법으로 핵 전면폐기"

일 아사히신문 보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은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폐기할 의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 중앙정보국(CIA)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이 지난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방북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북미간 협의결과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비핵화 조치를 받들일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도록 이미 IAEA와 조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에도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됐다.

아사히는 북한이 그간 핵무기는 군사기밀이라며 신고 자체를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핵시설과 한미일이 1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핵무기의 사찰에 응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폐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국은 짧은 시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중인 2021년 초반까지 신고부터 검증, 폐기 완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체제보장, 미국과 국교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으며 "단계적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대가를 받아들이고 싶어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북미정상이 ICBM만의 폐기에 합의하는 경우 한일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남게 된다며 "한국은 이러한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한다고 합의했다"고 해석했다.

비핵화 조치의 절차와 대가의 관계에 대해 북미는 정상회담 후 실무협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같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신문은 "핵폐기를 위한 기간과 북한에 대한 대가에선 의견 차이가 있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렸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 선언' 실현…이달 중순 고위급 회담

이행추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관계발전 분과위 등 3개 분과위 설치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필요한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행추진위는 남북관계발전 분과위,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위, 소통홍보 분과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 남북관계발전 분과에는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를 두기로 했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비핵화 부분을 두 정상이 잘 마무리를 해서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성격으로도 훌륭한 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임 실장은 이어 "국민이 인상 깊게 본 것은 두 정상의 솔직하고 격의 없는 대화였던 것 같다. 그 부분이 백미였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감동적이었다. 몇 달 전과 비교해도 인식 변화가 생겼고, 이는 젊은 사람들만의 변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핫라인 통화가 이번 주 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는 9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4·27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특별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거기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대북제재 등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대표에 김도균 靑 국방개혁비서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로 김도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53·육사 44기)이 내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정부가 육군 소장인 김도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조만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임명한 후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비서관은 이번 주에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국방부 대북정책 컨트롤타워다.

김 비서관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북한정책과장 등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남북 군사회담에 실무자로 참석한 바 있다. 또 이상철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는 과거 북한 관련 업무로 손발을 맞춘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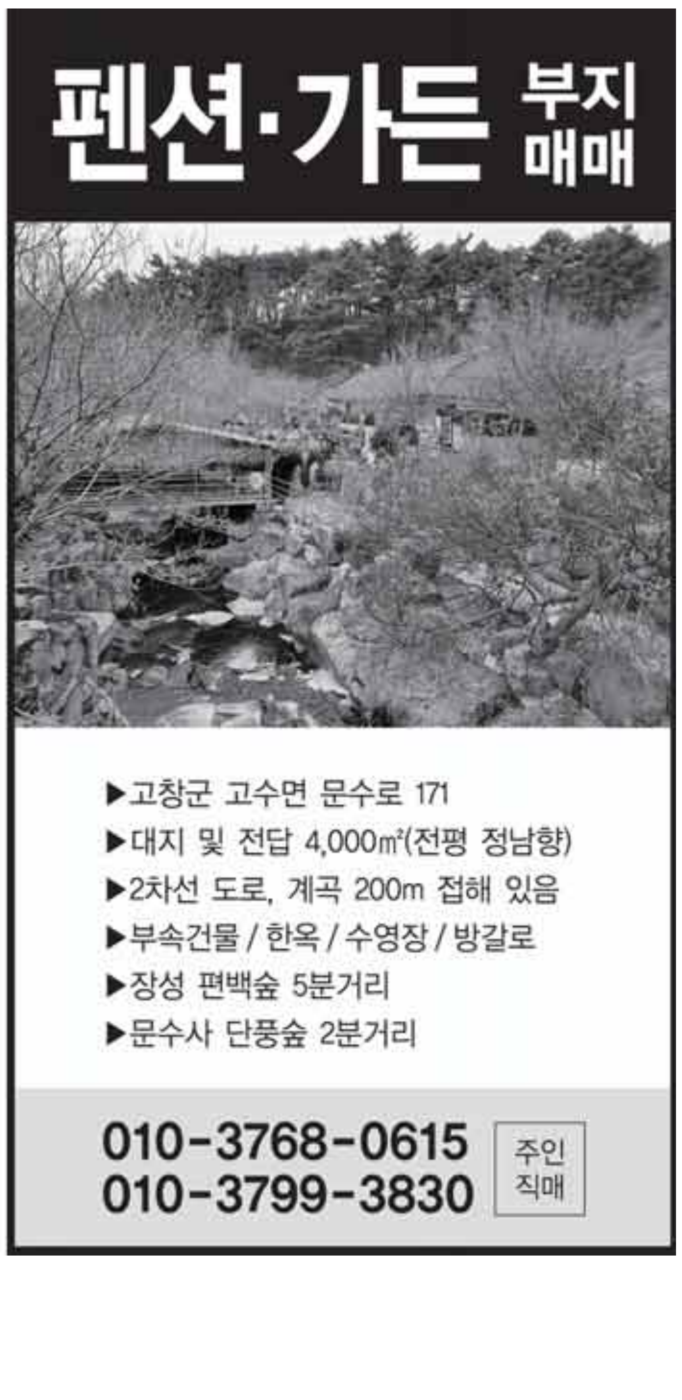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 업무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김 비서관을 임명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실시하는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

여권, 남색으로 변경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녹색 옷을 벗고 남색으로 갈아입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색이 남색 계열로 잠정 정해졌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2007년 여권 디자인 개선 공모전 최우수작(서울대 김수정 교수)을 토대로 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밑그림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